

엠바고: 2.12,조간부터(인터넷, 통신, 방송은 2.11, 16시 이후)

서면 보고자료

-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-

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 농촌

2020. 2. 11.



농림축산식품부



목 차



I.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	1
II.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3
III. 주요업무 추진계획	5
1. 산업혁신의 선도형 일자리 창출	5
2. 지역혁신의 따뜻한 일자리 창출	8
3. 공익직불제 안착	11
4.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	14
5.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차단	17
IV. 2020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	20

I.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

◇ 각종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

① (농가소득 향상) '18년 농가소득 4천만 원 돌파(4,207만 원)

* 농가소득 : ('15) 37,215천 원 → ('16) 37,197 → ('17) 38,239 → ('18) 42,066

- 선제적 시장격리, 생산조정 등으로 20년 전 수준(126천 원/80kg) 까지 떨어졌던 쌀값을 회복시키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

* 수확기 쌀값 : ('17) 153,213원/80kg → ('18) 193,568 → ('19) 189,964(평년 대비 20.6%↑)

- 직거래 장터 등 로컬푸드 확대를 통한 고령농·중소농의 판로 확충도 전반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

* 나주 : 로컬푸드 참여농가 4.4배 증가(9호→40), 월 공급액 12.8배 증가(454만 원→5,793)

② (가축질병 대응)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처로 발생 및 피해 최소화

- (아프리카돼지열병)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타 지역의 확산 방지

* '19.9.16.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첫 발생, 10.9. 경기 연천 이후 미발생 중(총 14건 발생)

- (구제역·AI) 지난해 1월 구제역 3건이 발생하였으나 역대 최단기간에 추가 확산을 차단*하였으며 사전 예방조치 강화로 AI 발생도 대폭 감소**

* 발생기간/건수 : ('15) 147일간/185건 → ('16) 45/21 → ('17) 9/9 → ('18) 7/2 → ('19) 4/3

** ('16/'17 동절기) 383건 → ('17/'18) 22 → ('18.3.18.~현재) 0

③ (농업 통상) '15년부터 진행해 온 쌀 관세화 검증 협의를 마무리하고, TRQ 증량 등 추가 부담 없이 관세율 513%를 확정

- 파프리카 중국 수출 검역 협상을 타결('19.11월) 하고, 신남방·신북방을 포함한 새로운 수출시장 적극 개척

* 농식품 수출액 : ('17) 6,826.5백만 불 → ('18) 6,925.7 → ('19) 7,028.2

◇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틀 전환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

① (공익직불제 제도 정비) 「공익증진직불법」 제정('19.12.27.), '20년 예산 2조 4천억 원을 반영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·재정적 기반 확보

② (신규인력 유입)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 추세*를 이어가고 있으며, 2030 귀농가구 비중도 지속 증가**하여 '13년 이후 가장 큰 규모 기록

* 농림어업 취업자 : ('17) 1,279천명 → ('18) 1,340 → ('19) 1,395(전년 대비 55천명 ↑)

** 40세 미만 귀농가구 : ('13) 1,164가구 → ('17) 1,325(10.5%) → ('18) 1,356(11.3%)

○ 영농정착지원사업(총 3,200명, 정착지원금·창업자금·농지·교육 등 종합 지원) 및 스마트팜 보육센터(142명) 운영 등 청년농업인 육성 체계화

③ (식품안전성 제고)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

○ 강화된 농약사용 기준(PLS) 시행('19.1.)으로 부적합 농산물 유통 사전 차단

○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을 계기로 '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'을 수립(부처합동, '17.12월)하고, 전체 산란계 농가(약 1,500호) 살충제 검사 실시 등 안전성 확보

* 계란 안전성 부적합 농가 : ('17) 78호 → ('18) 9(전년대비 88%↓) → ('19) 2(77.8%↓)

④ (혁신거점 확충) 스마트팜, 식품산업 등 농업 성장 인프라 구축

○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선정(상주·김제 '19.12월 착공, 고흥·밀양 설계 중)하여 기술·경영 중심 농업 확산의 거점 마련

○ 식품산업 기술 개발 및 이전('19 : 24건), 생산자-기업간 계약재배 확대('18 : 11천 농가/911억 원 → '19 : 14/1,228) 등 추진

◇ (아쉬운 점) 농림업 일자리 증가세를 유지하고, 농업·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

○ 공익직불제 등 '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개혁'의 성과를 도출하고, 주요 채소류 수급불안 해소, 가축질병 사전 예방 등 고질적인 문제 개선 필요

Ⅱ.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 업무추진 여건

□ 농업·농촌의 성장가능성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관심 증가

- 농림어업 취업자는 '17.6월 이후 지속 증가하여 타분야 고용부진에 따른 고용 안전망이자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부각

* OECD는 ICT 기술의 발달로 농촌이 새로운 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성장과 혁신의 무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

- 도시민 의식조사 결과(농경연, 1,500명), '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많다'는 응답률이 64% 수준('13 : 53.8% → '19 : 64.2)

□ 빅데이터 분석* 결과, 국민들은 일자리, 공익직불제 등 지원 정책과 혁신기술, 농산물 가격 등 다양한 의견 표출

* 농업·농식품 관련 키워드가 언급된 뉴스 및 소셜미디어 340만 건 분석('18.1.1~'19.11.30)

-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·비전과 함께 초기 농업기술, 자금, 생활환경 등 정착 문제도 언급(9.6만건)
- 스마트팜 등 혁신기술의 활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, 가정 간편식·맞춤형 식품 등 유망 식품분야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(63만건)
- 국민들은 형평성과 소득보장을 위한 농업정책 개선에 큰 관심 (70.2만건 언급)
-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,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·제도 수립도 요구(59.6만건 언급)
- 축산 분야는 가축질병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 방역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주로 나타남(35.7만건 언급)

◇ 포용·혁신에서 '확실한 변화'를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
'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개혁'의 틀을 정착

- 금년도 농업분야는 △지역·산업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,
△농촌경제 안정에 주안점을 두어 5대 과제 중점 추진

□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농업·농촌 분야의 '산업혁신형·지역형
일자리' 확대

- ①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 인식하는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, 스마트
농업 및 수출, 농식품 벤처 등 기술과 자본 중심의 농업구조로 전환
- ②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체계적 귀농 준비를 지원하고, 민간과 공공
부문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강화

□ 농촌경제 안정을 위해 농가소득, 농산물 가격, 가축 질병 등 위험요인을
세밀하게 관리하고,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로드맵 마련

- ③ 중소농가의 소득안정과 환경·생태 보전 등 농업·농촌의 공익적
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'공익직불제' 시행 준비에 만전

* 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·농지, 소농 기준, 공익증진 활동 등 세부 시행방안 수립

- ④ 체계적인 농산물 수급안정 시스템 구축으로 농산물가격 급등락 최소화

* 수급불안이 큰 채소류 중심으로 사전적·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마련

- ⑤ ASF 국내 첫 발생을 계기로 철저한 방역 관리가 가능한 방식
으로 축산업 전환

* 차량·사람·매개체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 제도 개선

Ⅲ. 주요업무 추진계획

1 산업혁신의 선도형 일자리 창출

- ◇ (목표) 농업 창업 지원체계를 정비하고, 농업 구조변화를 위한 기반 구축
 - ① 농지·시설, 교육 등 2040세대의 농업 창업 지원 강화
 - ② 스마트농업, 민간투자 등 기술·자본 투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
 - ② 신남방·신북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로 우리 농식품의 시장 확대
- ◇ (기대효과) 미래 농업을 주도할 인적자원 확보 및 농업 혁신 촉진

가. 관련 현황

- 스마트팜 등 기술·자본 중심의 농업 구조변화와 혁신이 농업의 발전가능성을 높이고, 일자리 확대의 토대를 마련
 - * 새롭게 농업에 진입한 20대의 51.9%, 30대의 41.7%는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중시
- 농업 경영의 구조 변화(규모화, 전문화 등)로 생산관리 등 상용·임시근로자 고용 증가 추세
 - * 농업법인의 고용인력 증원 분야 : 생산 44% 전문관리 17%, 판매 11%, 가공 10%, 기타 18%
-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2040세대들이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하고 있으며, 시설원예·축산 등 기술집약형 농업을 선호
 - * 스마트팜 보육센터 교육생 142명 중 석박사·해외대학 졸업자 등 대졸 이상이 75.3%
- 취업, 가업 승계 등의 형태로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나, 실제 창업시에는 농지 및 시설확보, 수준별 교육 등의 어려움을 호소
-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기술 융합,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나, 빅데이터 인프라가 부족하며 모태펀드를 통한 생산분야 혁신창업 투자도 미흡
 - * 모태펀드 전체 투자('10~'19년 7천억 원) 대비 생산분야 투자는 12% 수준

나. 추진계획

① 2040세대의 창업 애로사항 해소

- (농지·시설) 농지은행 매입방식 다양화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('19 : 1,697ha → '20 : 2,240)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지 및 시설지원 강화
 - '유휴농지 개발 시범사업' 도입, 장기(10년 이상) 임대 시 우선 매입권 부여* 등
 - * 임대기간 : (현행) 5~10년 → (변경) 10년(기간 종료 후 매입 또는 임대 선택)
 -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 가능한 임대형 온실(30개소) 및 스마트팜(혁신밸리 4개소+지역특화2) 조성 확대
- (교육·컨설팅) 투자 실패 최소화를 위한 심층 창업·투자 컨설팅* 실시('20년 시범사업) 등 교육·컨설팅 기능 강화
 - * 2억원 이상 투자하려는 청년농 대상, 가장 적합한 투자방식·내용과 필요한 역량 등 자문(자부담율 완화 50%→30)
 - 중급 수준의 역량을 고급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장지도(문제해결형)·학습조직·전문가 교육을 결합한 '스텝업 기술교육과정' 확충
- (판로지원) 청년 특화형 직거래장터* 기획·개설 지원 등 新유통경로 지원
 - * 청년들의 창의적인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·지원 방식
 - 온라인 판매 컨설팅*시 청년농업인을 우선 지원하고, 온라인몰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
 - * 상품발굴, 상품 설명페이지 제작, 상품 사진·동영상 촬영(스마트 스튜디오 활용) 등

② 기술·아이디어 바탕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

-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인 혁신밸리를 조성*하고, 전문인력 육성
 - * (1차) '19.12월 착공 → 실습·임대형 농장 완공('20.4분기) → 실증단지 완공('21.2분기)
 - (2차) '20. 6월 착공 → 실습·임대형 농장 완공('21.2분기) → 실증단지 완공('21.4분기)
 - 청년창업 교육과정(이론·실습 등 20개월)을 통해 전문인력을 본격 양성('19 : 142명 선발 → '20 : 200 추가)하고, 스마트농업 특수대학원*을 신설
 - * 3개 대학 이내 컨소시엄 구성, 20억 원(연간)·4년간 지원, 20명(연간)×4년간 80명 인력 양성

-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(혁신밸리 연계) 구축('20: 47억원) 등 스마트 농업 전후방 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
- 선도국(네덜란드)과의 기술격차(4.0년) 해소 및 AI 기반 완전자동화 스마트팜 개발을 위한 대규모·다부처 R&D 조기 착수 준비
 - * 사업단 구성, 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('20 : 80억 원) 등('21~'27 : 3,867억 원)
- 창업농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펀딩 체계(진입→성숙) 구축
 - 창업단계 잠재력에 투자하는 '영 파머스 펀드*' (100억 원), 성장단계 '징점다리 펀드' (215억 원) 신규조성 및 투자회수 세컨더리펀드 추가 조성
 - * 우선손실충당금(정부출자분의 10%내 면책)도입, 초기(~2년차)농식품분야 의무투자비중 완화(최소 50% → 40) 등 민간출자 리스크 완화

③ 수출시장 다변화로 농식품 시장 확대

- (신남방) 스타품목(딸기·포도) 수출 애로 해소 및 한류 홍보 강화
 - 딸기는 모종 공동 재배* 및 선도유지 포장재·설비 지원으로 수출물량 확대 및 품질을 개선하고, 포도는 주산지(상주·김천 등)별 수출농가 전문교육 강화
 - * 공동 육묘장 설치·운영(진주·논산 각 1개소)
 - 한국 식품 박람회 등 마케팅* 추진 시 한류 행사 연계 강화
 - * 태국(K-CON 연계), 베트남(한-베 음식문화축제)
- (신북방) 청년해외개척단 파견('20 : 53명) 등으로 시장개척을 추진 하고, 물류여건 개선* 및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지원
 - * 수출기업 협의체 구성(3월) → 중앙아·몽골 내륙 공동운송 플랫폼 구축
 -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을 위해 유망국가에 시범온실(2개국, 1ha 규모)을 설치('20~'21)하고, 전문 재배사 등 인력, 기자재 등을 패키지로 지원
 - * '18년 스마트팜 수출 97백만달러 중 신북방 국가가 76%(74백만달러)
 - 수출업체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(3월)하여 수출물량을 공동 적재·운송하는 공동운송 사업 시범 추진(중앙아·몽골)

- ◇ (목표)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농촌지역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지원 강화
 - ① 귀농 지원체계 정비로 체계적 사전 준비와 안정적 정착 지원
 - ② 사회적 경제를 확산하여 사회서비스 제공, 공동체 복원,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도모
- ◇ (기대효과) 5060세대의 일자리 수요를 흡수하고,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

가. 관련 현황

- 베이비부머(55~63년생, 약 711만명)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와 맞물려 귀농·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
 - * 귀농귀촌 교육 실적 : ('15) 5,061명 → ('17) 8,182 → ('19) 10,146
 - * 귀농귀촌 상담·홈페이지 회원 : ('15) 10,076명 → ('17) 21,657 → ('19) 36,384
- 베이비부머의 47.8%가 귀농·귀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('19, KREI 국민의식조사)
- 전원생활에 대한 선호, 도시 대비 낮은 생활비(도시가구의 75~80% 수준) 등으로 인하여 은퇴 후의 삶을 농촌에서 설계하려는 수요 증가
 - 소규모 과수원, 채소재배를 선호*하는 등 겸업형 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, 체계적인 정보 획득과 사전 준비는 미흡**
 - * '19년 50대 이상 신규경영체(54,053호) 중 0.5ha 미만이 82.2%, 과수·채소 재배가 65.1%
 - ** 귀농전 특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(42.8%)가 많고, 정보 획득에 어려움(27.6%) 호소('19, 귀농귀촌 실태조사)
- 병원 등 생활 여건에 관심이 높으나,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인구는 적고 지역은 넓어 공공서비스 이용이 불편
 - * 공공서비스 비교(도시/농촌) : (방문요양기관 수) 53.3/15.2, (보육시설 수) 2,062/972, (응급실 이용시간) 18.3분/26.5분
- 민간과 공공 부문의 기능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·보완 필요

나. 추진계획

① 귀농귀촌 준비교육 강화 및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 운영

-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도시지역의 귀농 교육 중점 개선
 - 특·광역시(8개 시), 기술센터 미설치지역(13개 시)의 도시농협을 교육·상담 지원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(6월)
 - * 자산관리, 세제, 금융 도시농협의 전문성을 살린 특화과정 운영
 - 시·군 농업기술센터(154개)는 현행 품목·기술 교육 외에 주민 갈등, 정착실패 사례 등 농촌공동체 이해 및 귀농설계 교육 보강
- 귀농지역 탐색, 지원정책·일자리·주거 등 귀농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'귀농귀촌 통합 정보 서비스' 도입
 - 농정원(2.2만명), 지자체(1.4만명)에 분산된 귀농귀촌 희망자 정보를 DB화하여 지자체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
 - 교육, 주거, 생활SOC, 일자리 등 귀농·귀촌 통합지원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(7월)
 - * 향후 추가 연계가 필요한 주거·일자리 등 관계부처 서비스 발굴, 연계방안 등 협의
- 귀농전 자격·경력을 활용한 취업지원을 전체 시·군으로 확대하여 각 지역의 고용센터, 새일센터, 방과후 학교 등과 연계
- 지자체의 지역융화,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으로 확산하고, 활용실적이 우수한 시·군을 사업선정시 우대
 - 지역단위 시행가능 사업을 '(가칭)귀농귀촌 유치지원'으로 통합·확대 추진
 - * (기존) 도시민유치지원, 귀농인의 집, 교육 등 시군별 별도지원 → (개선) 관련사업 통합 지원

②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

- 읍·면 소재지 등 농촌 중심지에 보건·의료(보건소), 교육(도서관) 등 기능이 복합된 **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**를 집중 확충('20 : 104곳)
 - 지역이 농촌생활권별 생활SOC 투자 계획을 수립, 정부·지자체가 함께 투자하는 '**농촌협약**′ 방식 시범 도입('20 : 9곳)
 - * 정부 거점개발 사업과 지자체 배후마을 개발 사업을 상호 연계 추진
- **사회적경제조직**(협동조합, 공동체회사)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공공부문의 사각지대를 보완
 - * 사회·생활서비스 전달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개발 및 시범 지원('20 : 10개소)
 -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·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**사회적 농장** 확대('19: 18개소 → '20: 30) 및 **거점농장** 육성(4개소, 신규)
 - 농촌 초고령화에 대응, 사회적 농업과 연계한 '**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**′(커뮤니티 케어) 선도 모델' 개발 추진('20)
 - * 농촌지역개발 사업(인프라)과 사회서비스 기관 및 사회적 농장(서비스 제공)을 연계
- 농업·농촌의 공동체, 고유 자원 등을 활용하여 **지역경제 활성화**
 - (**특화 산업**) 지역 공동체가 농산물 가공·판매를 비롯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**일자리**를 창출하도록 지원('20: 신활력플러스 30개)
 - (**농촌 관광**) 국가 중요 농업유산, 찾아가는 양조장, 국유림 등 농업·농촌의 특색있는 자원을 상품화하여 지역단위 관광 활성화
 - *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: ('19) 16개소 → ('20) 27
 - (**농촌 태양광**) **염해간척지 활용**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 참여형 농촌 태양광발전 모델의 발굴·확산 추진
 - * 협동조합형(1곳, 직접 발전·이익 공유), 투자형(2곳, 기존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) 등

3

공익직불제 안착

◇ (목표) 국민, 소비자,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농업·농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, 실경작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관리

- ① 환경·생태계 보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익증진 활동 강화
- ② 직불금 신청·관리 시스템 및 농지제도 정비 등 관리 강화

◇ (기대효과)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 및 중소농업인 소득안전망 강화

*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긍정 평가 비율 : ('19) 64.2% → ('20) 68.2%

가. 관련 현황

□ 「공익직불법」이 국회에서 통과('19.12.27.) 되어 기존 9개 직불제 중 6개 직불이 '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'로 통합

개 편 전		개 편 후
경관보전직불, 친환경직불	⇒	선택형 공익직불
조건불리지역직불		경관보전직불, 친환경직불, 논활용직불
쌀소득보전직불 : 고정, 변동		기본형 공익직불
밭농업직불 : 고정, 논이모작		면적직불금(역진적 단가) 소농직불금(정액)

* 구조개선 목적의 경영이양직불, FTA폐업지원 및 FTA피해보전직불은 별도 운영

□ 농업인·단체, 전문가, 소비자단체, 지자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단가, 준수 의무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 필요

- (포용성 강화) 논·밭 작물 간 균형생산과 중소농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단가 설계
- (공익증진) 환경, 생태, 공동체, 먹거리 안전 등 공익창출자로서 농업인의 역할 확대 및 삶터·일터·쉼터로서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고

□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정수급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직불금 관리방식 개선, 농지제도 정비 등 사전 준비

나. 추진계획

① 공익직불제 세부 시행방안 마련 및 교육·홍보 추진

- (제도 시행) 농업인,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방안을 확정('20.2월)하고,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('20.4월) 추진
 - * '20.1월부터 농업인·단체,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·유관기관 설명회, 직불제 개편 협의회·TF 운영 등 50여 차례의 토론·설명을 통한 공감대 형성
- 이후 신청·접수(4~5월), 의무점검(7~10월)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 지급

< 세부 시행방안 주요 내용 >

◇ 포용성이 강화된 지급구조

- (소농직불금) 0.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 수준 지급 검토(직불금 개편 협의회 제시안)
 - 농촌거주 및 영농기간 3년 이상, 일정액 미만의 농외소득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대해 지급
- (면적직불금) 그 외 농업인은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 지급
 - 쌀 수급균형 및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「농업진흥지역내 논·밭 -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-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」 3단계로 차등화
- 과거 지급수준, 단가인상 예정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 결정

◇ 공익증진 활동 강화

- 농업·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·생태 관리, 농동체 활동, 먹거리 안전, 생태계 보전 준수 의무 강화
- 공동체 활동 등 신규 도입의무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완화된 의무·감액수준을 적용하되 연차별로 활동수준 강화

- (현장 홍보)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(농식품부) 및 시도별 공익직불제 시행준비 TF를 운영('20.1월~)하여 현장 연착륙 도모
 - 각종 농업인 교육, 온·오프라인 홍보물, 지역별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농업인 교육 및 홍보 중점 추진('20.상)
 - * 직불제 시행 단계별로 핵심 메시지를 동영상·광고·전문강사 교육 등을 통해 홍보

② 직불제 신청, 이행점검, 사후관리 각 단계별 관리 강화

- (신청) 신청에 필요한 기본 경영정보를 경영체 등록제로 일원화('20.3월)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
 - 신청단계에서 보조사업(8개) 이력정보를 사전 비교·확인하고, 동일 농지에서 수급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가 소명토록 조치
 - 경작사실 확인서,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된 경우에 직불금 신청 접수
- (이행점검) 현장점검 인력 확충* 및 드론 활용**을 통한 이행점검 효율화
 - * 조사인력 운영현황 : ('18) 754명 → ('19) 702 → ('20) 956
 - ** 활용 드론수 : ('18) 34대 → ('19) 99 → ('20) 131
- (사후관리) 명예감시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제 도입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, 부정수급 처벌 강화*,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향**
 - * (현행) 수령액 2배 추가징수 + 5년 이내 등록제한 → (개선) 5배 이내 추가징수 + 8년 이내 등록제한
 - ** (현행) 50만원/건, 연간 200만원 한도 → (개선) 최소 50만원~환수액의 30%, 연간한도 폐지
- (관리기관)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직불금 집행·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“관리기관”으로 지정

③ 농지제도 정비 등 임대차 관리 강화

- 농지이용실태조사 확대* 등 신규 취득 및 관외 경작자 소유농지 관리 강화
 - * ('19) 신규취득 3년 내 농지 +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전수 → ('20) 신규취득 5년 내 농지 + 관외경작자 소유 농지 + 불법임대 우려 농지
- 도시민·임차인 정보 직접 제공, 홍보강화 등으로 농지은행 수탁 촉진
 - * 수탁 시 기존 임차 관계 인정, 수탁 농지 면적 제한 폐지 등 제도개선 병행
- 농지 매입·임대를 확대하여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
 - * 농지 임대 시장 중 농지은행 비중(면적기준) : ('18) 9.5% → ('19) 9.6 → ('20) 10.2

4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

◇ (목표) 주요 채소류의 가격변동성 완화

- ① 관측 강화 및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으로 사전적 수급조절 강화
- ② 도매시장 이외의 대안 유통경로를 확산하여 합리적 가격형성 유도
- ③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

◇ (기대효과) 농업인 소득과 소비자 물가 안정

* 주요 채소류 가격을 안정대 수준(수급조절매뉴얼, 5개년 평균)으로 관리

가. 관련 현황

□ 전년도 이례적인 작황 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양파, 마늘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불안 발생

* 도매가격('19) : (양파) 594원/kg(평년비 35%↓), (깐마늘) 4,805원/kg(24%↓)

○ 관측정보(재배면적·작황 등)에 대한 신뢰가 낮고, 기후변화 등 생산 여건 변화가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측면

* 표본농가 관측정보 순응도('14~'18 평균) : 고추 18.3%, 양파 20.4%, 마늘 16.7%

○ 주요 채소류(무, 배추, 양파, 마늘 등)는 임의자조금에 머물고 있는 등 생산자 조직화가 부족하여 사전적·자율적 수급관리 미흡

○ 또한, 산지에서의 가격 형성기능이 미약하고, 수확기 출하물량이 도매시장에 일시에 집중되면서 가격 등락폭이 더욱 심화

* 공영도매시장(33개소) 경유율(청과) : 49.4%, 서울가락시장 경유율(청과) : 15.4%

□ 인구구조 및 식습관 변화 등으로 1인당 채소류 소비량 감소 등 유통·소비환경 급변은 수급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

* 채소류 1인당 연간 소비량(국민건강영양조사) : ('08) 107.6kg → ('17) 96.3

나. 추진계획

① 사전적, 자율적 수급조절기능 강화

- (관측 고도화) 전화조사 방식에서 실측조사 체계로 전환하여 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하고, 관측정보는 농가에 상시 공유·환류
 - 5대 채소류(배추·무·고추·마늘·양파) 표본농가(5,612호) 대상 재배면적 및 생육단계별 작황, 수확기 생산량 등 실측 조사('20.1월~)
 - * 전문 조사원, 생육모델 전문가, 현장 농업인을 참여시켜 정확도·신뢰도 제고
- (생산자 조직화) 양파·마늘 의무자조금단체 설립('20.7월)
 - 설립 초기 자조금 지원 조건 완화, 의무자조금 납부자에 정책 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
 - 설립 이후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수급불안 시 자율 수급조절* 기능 가동
 - * 일정기준 이하 저품질 상품 자율폐기, 출하규격 및 시기 조절 등(자조금법 제21조의 2)

< '20년 양파·마늘 수급관리 방안('20.상) >

- 재배면적·생육상황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잉예상 면적 사전조절
 - * 채소가격안정제(생산량의 15% 계약) 활용 생육단계 면적조절 및 출하정지 등 실시
- 생육상황에 따라 수매비축, 출하시기 조절 등 선제적 수급안정 방안 마련·추진

② 도매시장 이외 다양한 대안 유통경로 확산

- (산지공판 활성화) ICT기술을 활용하여 산지(공판장, APC 등)와 소비자 유통주체(중도매인, 유통업체 등)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('20.상)
 - 양파, 마늘 등 주요 품목부터 전국 산지공판장(43개)·APC 등을 통한 상품공급체계를 갖추고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(2,200명) 등이 구매자로 참여
 - * 출하장려금(평균 0.45%) 인상, 위탁수수료(통상 거래금액의 4~7%) 인하 등 출하자 및 수요자 유인방안 마련

< 제주 감귤 농협공판장 전자 입찰 사례 >

- ▶ 전자 입찰방식으로 출하자(제주 APC)와 육지 매매참가인 간 거래를 체결하고 지정 장소(도·소매상)에 직접 배송('16.11월부터 시행)
- ⇒ 산지주도로 입찰 예정가격을 제시하고 유통량을 조절하여 시세 급등락 방지

- 최소거래단위(파렛트단위)를 설정하고,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함으로써 중간유통비용 및 소요시간 절감
- 전자거래시 경매 허용(고시 개정), 전자거래 운영기관에 농협 추가 (농안법 시행령 개정) 등 제도 정비
- (로컬푸드) 시민사회·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확산기반 조성
 - 지역 맞춤형 푸드플랜*(농촌형, 도농복합형, 도시형) 수립을 지원하고, 지역별 '로컬푸드 지수'를 측정·발표('20.3월, 시민단체 협력)
 - * 지자체 푸드플랜 수립(누계 기준) : ('19) 46개 → ('20) 64 → ('22) 100
 - 로컬푸드 판매장 등 소비접점을 확대('20 : 680개소)하여 중소농가 및 사회적 농장의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
 - 학교·군대 등 공공급식 전반으로 로컬푸드 공급 확대(행안부·교육부 협업)

년도	정부청사	혁신도시 공공기관	군대	학교
'20	세종청사	김천, 진주, 원주	전 군납조합(47개) 단지장 전면폐지	회성 아산 부여 홍성 원주
'21	대전청사	부산, 제주, 음성	계룡대, 국방대	초 학급급식지원센터(89곳)
'22	기타 소속기관	대구, 울산	초 간부식당	센터 미 구축 지자체

③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

- 바우처 등 국산 농식품 소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안정적 수요처 확보
 -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*으로 국산 채소, 과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 착수 및 도입방안 마련
 - * (예시) 기존 식품비(생계급여)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% 이하 취약계층
 - 초등 돌봄교실(24만명) 대상 과일간식 지속 제공* 및 임산부(시범지역 45천명)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규 공급(월 2회)
 - * 예비타당성 조사('19.5~) 완료 후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검토
- 식품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원료재배 단계부터 계약생산·수매·가공하는 '식품원료 계열화'사업 도입('20 : 10개소)
 - * 소면적 재배작물 등 원료 확보가 곤란한 품목에 대해 계약재배 자금 등 융자지원

◇ (목표)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고, 발생 시에도 조기에 확산 차단

- ① 바이러스의 주된 유입·확산 요인인 축산 차량 관리 강화
- ② 방역에 적합하도록 농장 사육환경을 개선
- ③ 방역 책임성 제고를 통한 농장단위 방역강화
- ④ 역학조사 등 방역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 향상

◇ (기대효과) 가축질병 발생과 이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 최소화

가. 관련 현황

□ '17년 이후 가축질병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,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새로운 가축질병이 유입되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

- 특단의 방역조치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있음에도, 직접적인 방역비용* 외에 지역 축제 취소 등 국민 경제에 부담 초래

*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살처분보상금 등 직접비용만 2천억 원 이상 투입

□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차량 출입제한, 사육환경 관리, 농장단위 방역조치 강화 필요

- 그간 역학조사 결과, 차량과 사람이 주요 원인*임에도 불구하고, 농장내부까지 차량이 진입**하고, 종사자의 방역 기본수칙 준수도 미흡

* '14년 이후 AI 발생 원인은 출입차량 35.3%, 축주·종사자 23.6% 등

** 양돈농가 차량 방문 빈도(1개월) : 사료운반 16.1대, 가축운반 8.1대, 분뇨운반 6.1대 등 39.4대

- 방역시설 미흡, 과밀사육 등 사육환경도 방역 취약요인으로 작용
- 소독자원, 방역관련 업체 관리, 역학조사, 연구개발 기능 강화 등 정부의 방역지원체계도 보다 강화할 필요

나. 추진계획

① 축산차량 출입통제 제도화

- 농장 시설구조 유형별 축산차량 통제요령을 마련·배포하여 차량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('20.3월)
-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축산차량 우회, 축산분뇨의 권역별 이동 제한 등 위험시기 취약지역에 대한 축산차량 통제방안 마련
- 도축장, 분뇨처리장 등 축산시설의 차량 출입과 축산차량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('20.하)
- 농장진입 확인 등 축산차량 관리에 대한 정밀성 제고를 위해 GPS 관제 시스템 고도화('20.6월)

② 방역에 적합한 사육환경 조성

- 축산정보시스템을 통해 농가의 사육밀도를 상시 확인하고, 지자체·관계기관(축평원, 방역본부 등) 합동점검으로 관리 강화
 - ASF·AI 등 방역 취약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, 강화된 방역 시설기준을 농가에 적용(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 중)
 - 손씻기,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기본수칙 준수가 가능한 시설·장비 구비, 오리농장의 분동(分洞) 통로 설치 등 농장 시설기준 강화
- *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등 개정('20.하)
- 기존의 소규모·노후화된 축사를 악취저감, 차단방역이 가능한 스마트 축산단지로 이전·조성('20 : 5개소)

③ 농가단위 방역 강화

- 선언적으로 규정된 농가 방역 준수사항을 구체화*하고, 관련법에 산재된 점검사항을 통합·체계화한 통합공고(안) 마련('20.6월)
 - * (예시)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→ 농장 출입문을 잠그고, 방문목적을 확인한 후 축사 경영에 관련없는 방문인 경우 방역 상 방문이 금지됨을 안내
- 축산관련기관에 점검권한을 부여하여 점검 효율성 제고
- 농장별 방역조치 점검결과 및 개선내역이 포함된 농장별 온라인 방역관리카드* 도입
 - * 현재 가금 전업농가(4,190호) 대상 시범운영 중이며, 양돈 등 단계적 확대
- 방역시설 미구비,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 등 방역의무 미준수 사항에 대한 페널티 강화

④ 방역지원체계의 효율성 강화

- 전문가 활용 등 역학조사 전문성·신속성 강화('20.상)
 - * 축산·방역·야생동물·지리 등 역학 연관 분야 전문가 자문단 구성·운영
- 지자체·농협 등의 소독자원 현황을 전산화하여 상시 관리하고, 광역방제기(20대) 지자체 지원 등 소독지원 강화('20.상)
- 살처분·매몰 업체, 매몰장비, 랜더링 등 방역관련 업체·장비에 대한 관리 기준 보완·구체화('20.상)
- 축사의 사양관리·방역소독·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'(가칭) 사육관리업' 도입 검토('20년 연구용역)
- 동식물 질병 병원체 연구, 진단법, 역학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,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구 설립 검토('20년 연구용역)

IV. 2020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일자리가 늘어나는 활기찬 농업

확실한 창업 지원



-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공급 확대('19: 1,697ha → '20: 2,240)
- 투자 실패를 줄이기 위한 심층 창업 · 투자 컨설팅 도입 (2억원 이상 투자자 대상)

안정적 성장 지원



- 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기술교육과정 도입 : 중급→고급으로 역량 도약
-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 개설 : 청년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

민간투자 활성화



- 스타트업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'영 파머스 펀드' 조성('20년 100억원)
-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'정검다리펀드' 조성 ('20년 215억원)

스마트농업 확산



- 스마트팜 창업보육 확대: '18: 45명 → '19: 97 → '20: 200
-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, 민간 개방

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



사람이 돌아오는 따뜻한 농촌

귀농귀촌 서비스 접근성 향상



- 도시지역 농협에서도 귀농귀촌 상담, 교육 등 서비스 제공
- 수요자에게 먼저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 운영

농촌 생활의 변화



- 농촌 생활SOC 복합센터 확충 ('20년 104곳)
- 사회적 농업(사회적농장 30곳, 거점농장 4곳 선정) 확산

활기찬 농촌 경제



- 국가 중요 농업유산, 찾아가는 양조장, 국유림 등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
- 신활력 플러스 지원으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(30개소)

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

중소농업인 소득안정



- 0.5ha 이하 농가는 소농 직불금 연 120만원 수준 검토

농지의 효율적 이용



- 논, 밭 작물간 지급 단가 차이 완화

농업인의 위상 변화



- 식량 생산자 → 공익적 가치의 창출자

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

생산자 중심의 수급 조절



- 생산량 관측 고도화(전화조사→실측)
- 수급이 불안한 양파 · 마늘 부터 생산자 의무자조금단체 설립

대안 유통경로 활성화



- 전국통합 온라인 거래 플랫폼 구축(20.상)
-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확대 ('19: 46개 지자체 → '20: 64)
- 로컬푸드 판매장('19:469개 → '20:680)

국민 먹거리 지원



-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시범지원 (연간 48만원 상당)
-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시범공급 (4만5천 명, 월2회)

가축질병 걱정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

축산차량 관리



- 농장 수준별 차량 출입관리 기준 마련
- 축산시설과 차량 관리 강화

농장단위 방역강화



- 축산 정보 시스템 활용, 농장 점검 강화
- 농장별 온라인 방역관리카드 도입

방역지원체계 개선



- 역학조사 전문성 · 신속성 강화
- 동물질병 종합 연구기구 설립 검토